

# 이슈리포트

**어린이 성폭력 피해, 정말 근절하고 싶다**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성평등의식의 과거와 현주소**

안상수 | 본원 연구위원

**남성성 규범과 젠더화된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성구매**

조중헌 |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여기자의 시대는 왔는가?**

심양섭 | 『여자가 기자가 된다』 저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현황**

주재선 | 본원 전문연구원

# 어린이 성폭력 피해, 정말 근절하고 싶다

이윤 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들어가며

2008년 봄을 재촉하던 어느 날 안양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교 2명의 유괴·성폭력·살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어느 누구도 믿고 싶지 않던 사실이 드러나는 수사과정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기억에 똑똑히 남아있는 2006년 용산 사건, 2007년 제주 사건 등과 함께 우리 역사에 아프게 각인되었다. 안양 어린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산에서 여자 초등학교 납치미수 사건이 기록된 CCTV 동영상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면서, ‘이래가지고야 맘 놓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느냐’는 우리사회의 불안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 4월 말 언론에 보도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어린이와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한 학교·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 끊임없이 쏟아지는 대책, 대책, 대책

정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법무부, 여성부, 교육과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사안인 만큼 법개정, 성교육 실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등 많은 대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었다. 사실 이 중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이런 노력은 이미 꾸준히 실천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성실한 실천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엄벌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각종 대책이다. 지난 5월 21일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장치부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많은 법률 중 이 두 가지는 이번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정부 혹은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치추적장치부착법은 시행 개시일을 올 10월에서 9월로 한 달 앞당기고 부착허용기간의 최대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폭력특별법은 13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법정형에 사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단한 개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체로 보다 중한 형벌로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표명되어 있다.

###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 · 인권단체 등의 우려 깊은 목소리도 있었으나, 재석 의원의 대다수 찬성으로 위 법안들이 통과된 것을 보면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며, 이런 처벌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책 마련 과정에서 무엇이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사회의 성폭력 고소 · 신고율은 10% 이하로 추정된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상담소를 찾아오는 생존자들의 경우에도 고소율은 약 15%정도에 머문다. 왜 이렇게 고소율이 낮은 것일까?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구제받고자 해도, 피해자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 때문에 고소하여 사건을 드러낼 용기를 갖기가 어렵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고소하여도,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 ‘목격자가 없다’, ‘저항을 증명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의 진술을 성인의 시각에서 판단하여 일관성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쯤 되면 누가 사법절차를 ‘공정하다’고 신뢰할 것이며, 누가 감히 이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에 맞서 자신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겠는가.

성폭력 범죄가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계는 ‘성폭력 전담제’를 만들어서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고 전담 재판부(시범운영)도 구성하였지만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무척 회의적이다. 이 제도를 놓고 전담자는 있지만 전문가는 없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은 전담관이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투자는 적고, 잦은 보직순환으로 전문성을 키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식을 개발해야하고, 어린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기법도 연구 개발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도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투자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술녹화제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 피해자는 피해발생 당시 판단력이 미숙하고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없어 스스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공소시효’ 제도에 발목이 묶여 어떻게든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 법적 구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일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물론 공소시효가 비단 성폭력 범죄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므로 보다 정치한 논쟁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쉽게 은폐되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상응하는 처벌’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처벌이 가지는 예방효과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쉽게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고소해도 유죄를 밝히기 쉽지 않은 현실이 결국 범행을 부추기는 것이다. 형량의 2-3년 차이보다는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가 범행 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이다. 당장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간단한 대책일 수 있겠으나 올바른 현실 진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체계적인 가해자 교정교육 없이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민간기관에서는 ‘강간 통념과 여성 비하의식 등 잘못된 가부장적 성통념을 수정한 후 이를 반복해서 학습 훈련시키는 것이 약물치료보다 더 효과적’(여성신문> 4월 4일자)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된 성폭력범죄자 교정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치료감호법 내용에는 소아 성기호중,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하는 것은 재범방지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

하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성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매일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법개정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사실 막막한 심정이다.

얼마 전 일산에서 여자 초등학교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납치하여 했던 가해자는 이미 유사한 범죄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전과자였다.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재범방지 효과는 없었던 모양이다. 10년이라는 중형 끝에도 결국 벌어지는 '재범'의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엄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엄벌만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제 아무리 CCTV를 많이 설치하여도, 많은 사람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CCTV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반드시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 중에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다. CCTV도 전자장치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이 모든 장치가 사람의 힘을 넘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행하는 가해 행위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가해자는 가족, 직장상사나 동료, 학교교사나 선배, 이웃집 아저씨, 테이트 상대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소아기호중 등의 증세를 보여서 내가 선별하여 피할 수 있거나, 불편한 느낌을 준다고 쉽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성차별이 만연하고 나이주의가 뿌리 깊으며, 한 축에는 '성'을 약자를 정복하고 상품처럼 소비하는 대상으로 가르치고 다른 한 축에는 성을 너무나 소중해서 꼭꼭 숨겨야 할 것으로 가르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성폭력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의 구조,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일은 너무나 멀고 큰 일, 당장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다. 물론 이런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이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폭넓게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왕따문화가 횡행하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학교교육은 커다란 변화가 필

요하다.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그 어떤 교과목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남자 어린이에게 ‘정복’을 가르치면서, 여자 어린이에게 안전을 이유로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평화와 공생을 익히고 훈련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교육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CCTV와 전자장치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경쟁과 위계 중심의 사회 질서와 폭력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질서 안에서 사회적 약자는 항상 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배와 정복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평화와 공생을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지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로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는지, 내 아이만 말고 옆집 아이도, 우리 동네 아이들도, 우리사회의 아이들도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평화와 공생을 몸으로 익히며 살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돌보고 키우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 같이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사회적 돌봄의 인프라, 친인간적인 사회시스템 등 총체적으로 새롭게 고민하고 디자인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 내놓는 반짝 대책이나 급하게 개정하는 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끊임없는 투자와 쉽 없는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단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하게 실천해야 할 대책이다.

# 성평등의식의 과거와 현주소<sup>16)</sup>

안상수 본원 연구위원

## 서론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불식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의식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의식연구는 젠더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학술적 연구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제도적 규제차원에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실행 등은 표출된 차별적 행동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으로 그 이면에 작용하는 비가시적인 영역에서의 의식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오래전부터 지적받아왔던 부분이다.

성인지적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그리고 양성평등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훈련방안을 수립하는 일에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이 여성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의 성역할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여성관련 문제 및 성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도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정경아, 1999),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이수연·김혜영, 2002),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 2007) 등이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성차별의식 검사개발 동향에 비추어 이들 검사가 갖고 있는 구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들 검사가 활용된 전국단위의 조사로 이루어진 연구들(안상수 등, 2004; 이수연·안상수·황정미·김인순, 2006; 안상수 등, 2007)에서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평등의식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기념 국내학술대회(2008, 4, 29)에서 발표한 글임

하였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각기 다양한 계층과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성평등의식이라는 본고의 특성에 맞도록 재분석을 통해 일반국민의 성별 및 연령간 비교와 연도별 변화추이를 검토해 보았다.

### 성평등의식검사의 개발 동향

전통적으로 성평등 및 성차별적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들은 피검사자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고정관념에 대한 승인과 수용의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성역할 태도의 구성개념(구인)은 성평등주의 혹은 성차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성이 깊다. 즉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이거나 편견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에 관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데올로기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Campbell 등, 1997).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정경아, 1999)는 성격특성이나 성역할만을 다루는데서 벗어나 남녀의 능력과 역할, 사회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태도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인지적 측면의 신념, 감정적 요소인 편견, 그리고 행동적 요소인 차별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에서는 모두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4개 영역별로 20문항이 나뉘진다. 검사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여성운동가들이 일반 성인들보다 더 남녀평등의식이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평등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다양한 집단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및 의식향상 프로그램 마련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는 2002년에 이르러 다시 청소년기의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60문항의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로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는 시대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평등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자신이 성차별적이거나 편견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동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간접적이고 은폐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본래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든 모호한 형태를 띠으로써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신의 차별적 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져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성차별적 태도는 과거처럼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고, 좀 더 은밀하고 정교한 형태의 편견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구에서는 성편견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



어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진전을 보았다. 그 일환으로 Symbolic Sexism이나 Modern Sexism, Neo-sexism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 등, 검사도구 및 측정방법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편견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 태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밀한 형태의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에 대한 혼합된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질시와 애정이 뒤섞인 양가적인 속성을 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녀평등의식검사를 비롯한 성편견적 신념과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들은 여성에 지향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만을 가정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적대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전제로 성평등(차별)의식만을 측정해 왔다. 그러나 여성은 과거나 현재 모두 남성들에게 폄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호와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Eagly & Madinic, 1993).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적대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온정적 태도 역시 사회구조적으로 열등한 여성의 지위를 고착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적대적 태도(HS: Hostile Sexism)는 여성의 성역할에서 이탈한 비전통적 여성 집단(전문직 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에 지향된 것으로 비호감과 배척의 처벌적 태도이고, 온정적 태도(BS: Benevolent Sexism)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수하는 가정주부나 요조숙녀에 지향된 것으로 그들이 지녔을 순수성에 대한 보상적 태도라 할 수 있다(Glick & Fiske, 2001).

여기서 온정적 측면의 성차별적 태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인 듯이 위장된 교묘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차별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과 남성 중심으로 성별화된 사회체제에 순응적인 여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적인 채찍이라 할 수 있는 적대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온정적인 차별에 타협하거나 순응하도록 만듦으로써 성불평등적인 사회체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성전체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형태의 성차별에 대해 여성이 쉽게 관용토록 함으로써 성불평등을 지속·유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개발된 검사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안상수 등, 2007)이다. 이 검사는 Glick과 Fiske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SI: Ambivalent Sexism Inventory)를 한국형(K-MSI)으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성, 연령 및 지역 등)을 사용하여 척도의 내용분석과 요인분석(탐색적 및

확인적)을 통해 각각 12개문항의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척도로 구성된 전체 24 문항의 검사로 제작되었다. 이 검사는 또한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검사로 개발됨으로써, 성별의식의 연령별 변화추이를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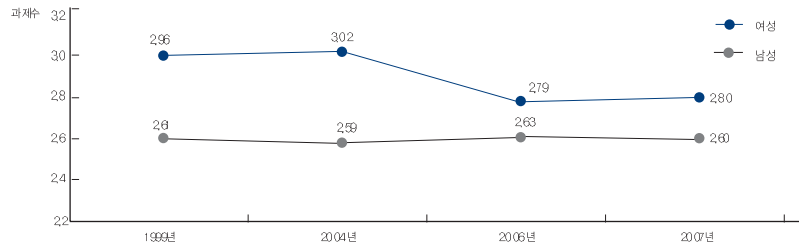
## 성평등의식의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의 성평등의식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정경아, 1999)를 활용한 전국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KGES(1999)의 검사개발 당시 보고서에 나타난 분석결과와 함께, 안상수·김혜숙·안미영·고재홍·이선이·최인철(2004), 이수연·안상수·황정미·김인순(2006), 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2007)의 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3개 연구는 KGES의 80문항 중 약 20문항을 요인부하량의 기준으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자료가 횡단적 자료(cross sectional data)이고 동일 응답자에 대한 패널자료가 아기 때문에 의식변화의 실재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이 분석의 주관심사는 동일 자료내에서 성별간 및 연령간의 차이에 두고 있다. 다만, 그 동안 성평등의식의 변화추이를 볼 수 있는 마땅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이거나 과거와 현재의 성별간 및 연령간 성평등의식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연구별로 선정된 문항이 다소 달랐고, 각 영역별 문항 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재분석에서는 평균점수만을 이용하였다. 연령범주는 KGES의 자료와 동일한 연령범주로 각 자료들을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일치시켰다. 2004년 및 2007년 자료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조사였고, 1999년과 2006년 자료는 일반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다. 2006년 자료의 범주가 불일치하는 것은 10년 단위의 연령대별로 구분한 자료였기 때문에 여타 자료와 일부 범주에서 달랐다.

### 1. 남녀의 연도별 성평등의식 차의 변화추이

아래 <그림1>은 각 연도별로 남녀평등의식검사 결과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1999년의 결과는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과정에서 80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이며, 나머지 2004년, 2006년, 2007년의 결과는 2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축검사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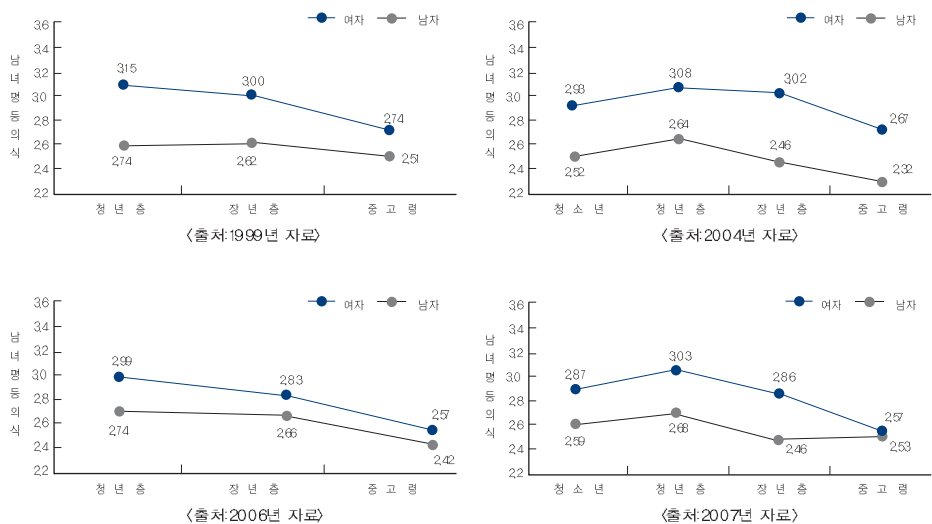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남녀평등의식의 성별 간 차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나타난 평균값의 분포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남녀평등의식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자료에서 성별간 격차가 줄었다는 점과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각 연도별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단자료가 아님으로 변화의 추세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의 성평등의식 변화의 정체현상을 간접적이거나 보여주는 것이다. 단축문항에서의 미세한 차이 혹은 응답대상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후에도 남성의 남녀평등의식에서 변동은 적고 여성의 남녀평등의식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단축문항 및 대상의 차이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남녀평등의식에서도 각 연도별로 변이가 관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기 위해서 각 연도별 자료를 성별×연령별 차이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 연도별 성별×연령별 남녀평등의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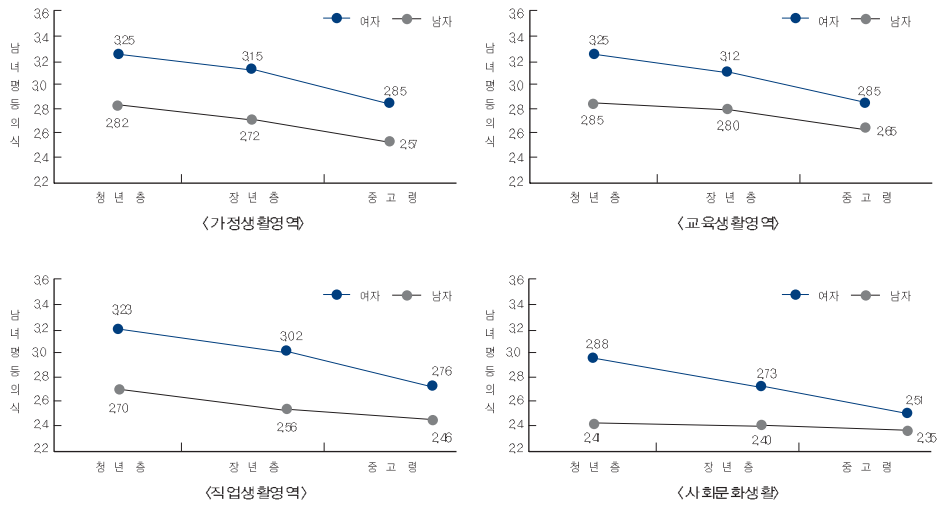
위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연도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연령 증가에 따라 남녀간의 남녀평등의식의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여성의 성평등의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이 연령증가에 남성의 성차별적 태도에 동조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평등의식이 보다 높은 집단으로 고려되는 젊은 연령층에서 남녀간의 의식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성평등의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이 남녀 모두 청년층의 성평등의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에게서의 성평등의식 지체가 성역할태도의 미분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부모세대 즉 장년층의 성차별적 태도에 동조 내지는 세대간 전이의 결과인지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전반의 제도적 변화와 평등가치 기조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성평등의식은 여전히 여성의 성평등의식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들 연구들은 성평등의식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수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의식개선에 있어서 교육부문의 노력과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 문화 전반의 평등가치 확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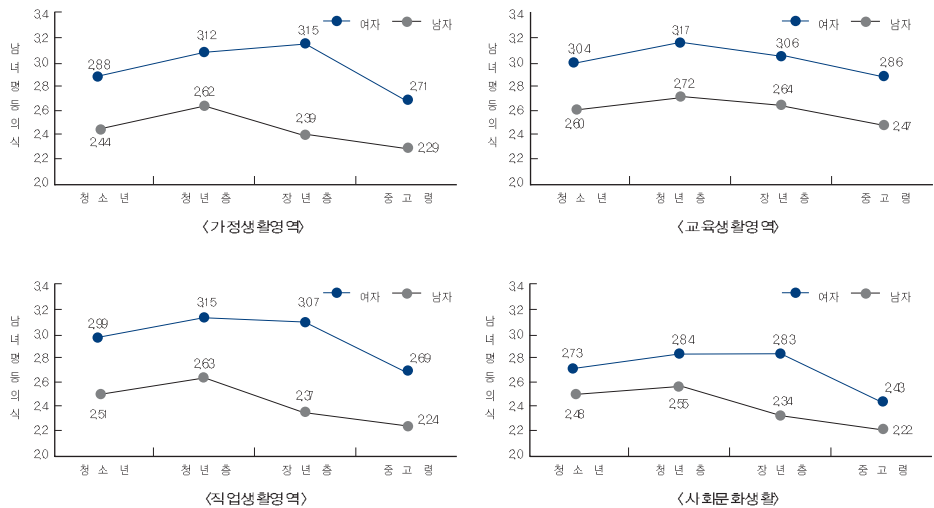
## 2. 성평등의식의 영역별 실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4개의 영역별로 성평등의식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평등의식의 지체가 일어나는 영역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번 분석에서는 1999년 자료와 2004년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의 지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3>은 KGES 1999년 자료에서 하위영역별 성평등의식의 성별 및 연령간 비교를 보여 주고 있고, <그림4>는 2004년 KGES 자료의 하위영역별 성별 및 연령간 비교를 보여 준다.

[그림 3] 1999년 자료에서 남녀평등의식의 하위척도별 성별×연령 간 비교



[그림 4] 2004년 자료에서 남녀평등의식의 하위척도별 성별×연령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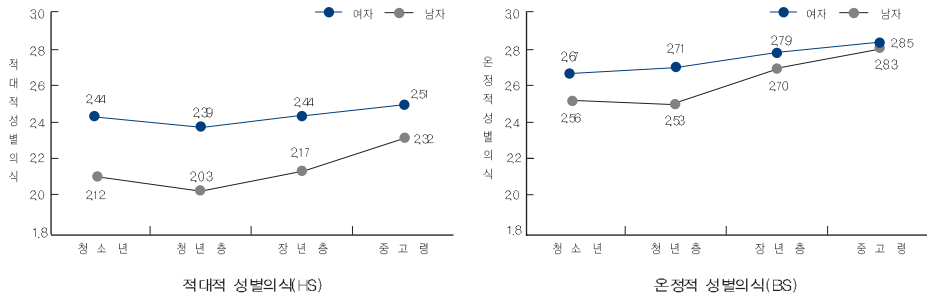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간의 의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은 모두 가정생활영역과 직업생활영역이었다. 이는 가정생활영역과 직업생활영역에서 여성의 성평등요구가 큰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여전히 성별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생활영역의 경우 일 반의 기대와 일치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간의 격차는 비교적 낮았고, 다른 영역에 비

해서는 다소 높은 성평등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간의 격차도 적었으며, 성평등의식도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이 겪는 좌절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오히려 여성이 성평등의식에서 지체된 남성들의 차별적 성역할 태도와 고정관념들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가정생활 및 직업생활 분야에서의 성평등의식 남녀간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 사회문화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3. 적대적 성차별의식 및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실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의 성역할이나 고정관념적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며,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임을 표방하는 온정적 성차별의식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안상수 등, 2007)에서 나타난 적대적(HS) 및 온정적(BS) 성차별의식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적대적, 온정적 성별의식의 성별×연령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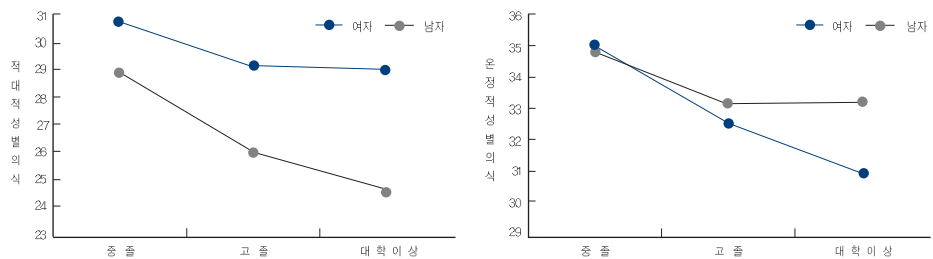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연령층별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4점척도의 이 자료에서 평균값이 높을수록 성차별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HS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적대적 성별의식이 높았다. 그러나 <그림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차이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부분이다. BS 역시 HS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성의 BS가 여성의 BS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고, 중고령층을 제외하고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온정적 성별의식이 연령증가와 함께 남성들의 온정적 성별의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대적 성

차별의식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것을 성차별적인 태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HS의 경우, 남녀 청소년(13-18세) 모두 청년층(19-30세)에 비해서 적대적 성별의식이 오히려 높거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KGES의 결과와도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HS와 BS에서의 교육의 효과

은밀하거나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이라 할 수 있는 온정적 성차별이 성차별적인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정적인 태도가 여성이 처한 현재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정당화할 수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수준에 따른 HS 및 BS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6] 적대적, 온정적 성별의식의 성별×교육수준 간 비교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HS의 경우는 교육수준별로 모두 남녀차이가 유의하였고, BS의 경우에는 대학이상인 집단만 남녀차이가 유의하였다. 한편 HS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는 유의경향을 보일 뿐이었으나 BS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는 주로 중졸과 그 이상의 학력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HS와 BS 모두 교육수준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HS와 BS가 낮아졌다. 특히 BS의 경우, 중졸과 고졸 여성들이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별로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여성 집단에서 BS의 성차별성에 대한 민감성이 낮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결과는 성별의식의 개선에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의식개선 노력이 남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여성의 의식개선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남성의 경우는

HS와 BS에 대한 의식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는 특히 BS의 성차별성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어

본고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남녀의 성평등 의식 변화를 추적해보았다. 대체로 남성의 경우에는 척도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을, 최근 10년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장년층과 중고령층의 감소가 뚜렷했다. 여성의 의식 감소와 관련하여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있었던 중요 사건이나 정책을 찾아보면 정책적인 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영역별로 나누어 볼 때,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최근 남성의 의식이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대적 성별의식과 온정적 성별의식을 나눠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의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별의식은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KGES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온정적 성별의식은 남녀 모두 척도의 평균값을 상회하며 비슷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이러한 태도가 성차별적 태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를 비롯한 이들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그 동안의 성편견과 성차별의 단편적이고 편협한 개념화에서 벗어나 성편견적 태도와 차별개념을 확장하여 다중적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데 의의가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여성에 대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차별적 태도를 식별해 내고, 특히 온정적 혹은 긍정적인 것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 태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성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차별이 불식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근거를 제공하고, 젠더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보다 확장된 성편견과 차별의 개념의 도입으로 새로운 차별적 태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게 되어 성별의식의 양상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관련 정책과 정책수용성에 대해 좀 더 세분화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등규범이 사회적 가치체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정책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쉽게 동의하면서도, 정작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성평등의식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다. 성평등의식의 변화추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횡단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문항을 일치시키고 연령대 분포를 고려한 지속적이고 인 반복적인 조사가 바람직하며 그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번 재분석에 포함된 3개의 연구들에서는 KGES 가운데 요인부하량의 기준으로 2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횡단적 자료(cross sectional data)이고 동일 응답자에 대한 패널자료가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국가 발전의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성평등의식의 변화와 발달 정도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개략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 정책과 비교될 때 더 많은 시사점을 지닐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와 분석들을 통하여 미래에 여성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지금까지의 정책이 갖는 성과를 가늠할 지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양희, 이수연, 김혜영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KGES-A) 개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K-GES) 개발.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2007). 다면성평등의식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 안상수, 안미영, 김혜숙, 이선이, 고재홍, 최인철 (2004).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2004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록집, 191-192.
- 이수연, 안상수, 황정미, 김인순 (2006).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십 연구. 2006년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102.
- Eagly, A. H., & Ml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Some answers from research 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ments of competence.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5, pp. 1-35). New York: Wiley.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남성성 규범과 젠더화된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성구매

조 중 헌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들어가며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와 성매매는 과연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걸까?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남성의 성구매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의 상업화 현상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최초 성구매 경험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성매매 시장 자체가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현 사회에서 성매매는 ‘예외적 일탈’ 경험을 넘어 일상적 남성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정당화해주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생물학적 성욕’에 관한 것이다. ‘남자들은 생물학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남성들 스스로에 의해 긴 시간 흔들림 없이 변호되어져 왔다. 이는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 혹은 ‘여자들이 시각적으로 유혹을 하니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의 논리들을 만들어내며,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자신이 경험한 성매매 행위가 ‘만족스러웠다’고 대답하는 남성은 현실 속에서 드물다. 즉,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욕을 어쩔 수 없이 분출시켜야만 하기에 성매매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성구매 행위로 부터 기대하는 자신의 욕구는 바로 그 ‘분출’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남성들에 의해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욕구’라는 것 역시 젠더 정치의 장 속에 놓인 사회적 구조물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구매를 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 섹슈얼리티와 감정, 관계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 복잡한 욕구와 그것이 현 사회의 젠더 구조 및 남성성 규범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성매매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 남성들과 어떤 방식으로 조우해야 할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진

행한 성구매 경험 남성들과의 면접 내용 및 관련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 권력지향적 남성성 규범과 성매매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사회화되는 남성성의 규범은 바로 ‘진정한 남성’이 됨으로써 나약하지 않은,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에서 불붙기 시작한 비판적 남성성 이론들은 – 비록 남성성을 고정되고 단일한 모델로서 설명해온 것은 아니지만 – 현대사회에서 핵심적 남성성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강한 남성상이며 이러한 규범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순응과 거부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지적한다. 이들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남성은 어릴 때부터 공격성, 독립성, 이성, 적극성 등 남성다움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한편, 두려움 등 ‘나약함’을 상징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여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약점으로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화되어진다. 그리고 나약함, 수동성 등 ‘여성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로 하여금 ‘권력 지향적’ 속성을 갖게끔 한다. 이렇듯 자신의 남성다움을 지켜내려 하는 가운데 남성들은 대인관계를 권력 투쟁의 성격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위계적 질서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sup>17)</sup>

지배적 남성성 규범을 체화한 남성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이렇게 남성성과 동일시해온 권력을 남성들은 수세기에 걸쳐 받아들이고 행사해왔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들에게 기득권과 이점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과 직장 등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지배관계와 남성 ‘개인’이 체화하는 핵심적 남성성의 권력 지향적 특질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특히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구성될까? 남성성 규범의 권력 지향성은 흔히 ‘생물학적’ 영역이라고만 여겨지기 쉬운 섹슈얼리티의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일찍이 매킨(C. Mackinnon), 드워킨(A. Dworkin)과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섹슈얼리티가 남성 권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17) Brannon, R. (1976), "The male sex role : Our culture's blueprint of manhood and what it's done for us lately", D. David and R. Brannon (eds.), "The 49% Majority", MMA : Addison-Wesley.  
Comell, R. W. (1995), "Masculinities", Cambridge, Polity Press.

남성의 성적 지배가 사회의 모든 권력관계의 핵심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으며, 많은 여성주의적 연구자들이 ‘정복/복종’, ‘적극성/수동성’, ‘남성성/여성성’의 이원론적 위계담론이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의 극적 순간으로서의 이성애적 성관계’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비판적 남성성 연구자들 역시 남성에게 있어 성관계가 권력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화와 소통’의 관계가 아닌, 여성에게 ‘힘’에 기반한 통제력을 실천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남성의 섹슈얼리티라는 것 역시, 남성성이라는 규범이 성애화되고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결합되면서 ‘젠더화되고 만들어지는’ 구성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 양상이 특히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남자들 여럿이 어울려 집창촌에 갔을 때 ‘정력이 약해보이기 싫어’ 동료들이 나올 때쯤 관계를 시작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힘’을 포장하고 과장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단편적 사례로서, 성적 능력을 통해 남성적 젠더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한 남성이 만들어낸 연출 행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걸(L. Segal)은 남성들의 “성적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 자신의 남성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느끼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여성과 달리 “남성들에게 젠더는 섹슈얼리티에 ‘기대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8)</sup>

그런데 남성의 강한 성적 능력은 홀로 맨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확인이 완성된다. 즉, 상대 여성이 보이는 가시적 반응을 통해서야 그것은 진정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면접을 했던 성구매 경험 남성들은 실제로 자신의 성적 만족도가 스스로 느끼는 성적 쾌감 뿐 아니라 상대 여성의 반응에 많이 좌우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상대가 흥분하고 있을 때’, ‘상대가 쾌감을 느끼는 걸 볼 때’ 자신들은 훨씬 더 만족을 한다는 것이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이 상대 여성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포르노 영화 속의 여주인공처럼 극도의 흥분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면모들은 자신과의 성관계에서 - 이 경우는 특히 성매매 과정에서 - 쾌감을 느끼고 통제되는 여성을 통해 본인의 성적 ‘능력(힘)’을 확인 받음으로써 정체성과 자신감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남성들의 욕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이상’은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힘든 것인 만큼 남성들은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와 강박을 느끼기도 하며, 따라서 상대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18) Segal, L. (1990). *Slow Mo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상황에 대해서는 불편함과 불만족스러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에게 있어 성매매 여성이 쾌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 한다면 ‘상대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 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듯 성매매 관계 속에서 여성은 남성이 원하는 만큼 그가 가진 권력에 대해 반응을 제공해줘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남성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 여성에게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외에도, ‘경제적 능력’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성구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능력 모두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우월한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많은 탈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권력 게임의 대상’일 뿐인 성매매 여성에게 같은 값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또 자신은 ‘정당한 대가인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는 남성들의 ‘거래’ 적 사고를 증언하고 있다. 즉, 돈의 ‘(스스로 공정한 거래라고 여기는) 지불’을 통해 확보된 경제적 능력으로써, 권력을 갖고 타인을 좌지우지하고파 하는 남성 욕망은 실현된다.

### 남성성 규범의 그림자 : ‘위안’을 위해 ‘구매’하는 여성

앞장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남성성 규범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젠더구조는 ‘독립성’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을 키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남성성’의 수립에 일조했지만, 그 결과로서 현대 남성들은 감정의 억제 등의 정서적·관계적 한계를 갖게 된다. 즉 권력 지향적 남성성, 그리고 그와 맞물려 있는 젠더화된 사회구조는 남성으로 하여금 여러 형태의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게 해주었고 동시에 여성은 ‘체계적 억압’을 받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남성들은 소외감과 고립감 같은 정서적·관계적 한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남성성과 남성지배구조가 갖는 ‘이면’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친밀함과 감성의 고갈, 공적 영역에서의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전통적 결속의 부재로 개인이 느끼게 되는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성들은 ‘타자’로 상징되는 ‘여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주로 이러한 구도에서 이야기되는 여성은 ‘낭만적 사랑’의 대상인 애인이거나 아내이지만, ‘낭만적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성관계인 성구매를 통해서도 남성들이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서적 욕구에 의한 성구매 행위’에 대한 자기 설명으로서, 남성들은 ‘마

음이 허해서' 서로 '공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성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면을 공략하고 있는 대표적 성매매 형태가 - 따뜻한 대화를 비롯해 밥도 챙겨주면서 출근 시켜주는 등의 -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안마 시술소 성매매이다.

성구매 남성과의 인터뷰를 했었던 신동원(2005) 역시 인터뷰 참가자 남성들에게 있어 좋았던 기억으로 남은 성구매 행위는 "성매매 여성이 '직업여성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 '정성스럽고 진심어린' 언행을 했을 때, 성행위 이외의 '애기'와 '대화'를 깊고 편안하게 나누었을 때, '일대일(1:1)'의 느낌이 나는 와중에 '친밀함'이 있을 때"라고 지적하며, "성구매를 통해 남성들은 감정의 소통, 힘듦과 외로움의 해소, 스킨십 등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러한 모습들은 남성들이 권력을 통해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신감'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성적 반응을 필요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 관계적 한계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역시 여성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구매 남성의 만족을 위해 준비되는 물적 · 정서적 환경은 '현실'이 아니며, 말 그대로 '준비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성매매 경험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과 함께,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 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 업소 여성들이 보여주는 다정함과 정서적 교류가 돈을 위해 '조작된' 것이고 또 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조작된 쾌감'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 집단적 남성성과 성매매

주지하다시피, '개인으로서의 남성'과 '집단으로서의 남성들'이 보이는 행동양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남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며 연대 혹은 동맹적 성격을 띠는 '남성 동성 집단'은 대체로 (여성성보다) 강하고 우월한 남성성을 기반으로 구성원간의 동질성 형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양상은 곧잘 자신들의 우월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성성의 유아적이고 노골적인 과시, 여성비하적인 남성 동맹적 의식, 여성성과 친밀함에 대한 거부 등과 같은 -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의 특성을 지닌 - 행위로 연결되곤 한다.

동성 집단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서로간의 결속력을 공고화하는데,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장치는 일상에서부터 성매매, 성폭력에 이르기

19) 신동원 (2005), '성구매 행위와 남성 성문화', 속명여대 석사논문.

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들이 성매매 업소를 갈 때 동행 없이 ‘혼자’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집단 문화 속에서 주로 동료 및 선후배와의 술자리를 통한 어울림을 통해 성구매를 하게 된다는 많은 조사 결과들을 볼 때, 이러한 문화는 남성의 ‘성본능’이라는 생물학적 요구가 아닌, 지배적 남성성의 영향을 받는 동성 집단 문화의 의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대학 동기 모임이나 전우회 모임 등 매우 다양한 집단들이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연령이 좀 더 어릴 경우에는 ‘딱지 떼기’ 과정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아직도 많은 남성 청소년들이 성구매를 ‘진짜 남자의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선후배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처음으로’ 가는 경험을 한다. 또한 군 입대 직전이나 휴가를 나왔을 때, 아니면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 또래 집단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성경험이 없는 친구의 동정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빼어주는 것’ 역시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한 ‘성인식’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남성 집단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성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혹은 비즈니스 상의 성매매이다. 이 경우 형제애(fraternity)적 성격을 띠는 앞의 유형들과는 달리 정서적 유대감은 훨씬 낮지만, 회사의 ‘회합’ 차원의 술자리에서 2차·3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매매 자리는 아직 여성의 사회진출이 부족한 가운데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여성배제 - 및 남성 카르텔 - 등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공유하며 ‘우월한 남성으로서 자신들의 집단정체성과 결속력을 다지는 남성 집단 문화 속에는, 그러나 실상 수면 위로 드러나는 ‘동질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성구매를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 그것이 직접적으로 여성주의적 성찰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 다양한 이유로 성구매의 현장에서 가급적 빠지고 싶어 하는 남성 개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집단’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강요’로서 다가오게 된다. ‘개인에게 열외는 없다’는 집단의식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서열의식이 강요되면서 집단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 동료들이 제재를 취하기도 하며, 성매매의 거부가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 남성성을 상징하는 - 경제적 능력 등의 상실로 해석되어지면서 개인은 성구매를 권유·강요받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함 혹은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들은 ‘성구매를 함께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실패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구매를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이상의 상황들 속에서도 성구매를 거부하고자 하는 신념이 강할 경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남성들의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핑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집단적 남성 규범에 파묻혀 그것과 - 아직은 작게나마 - 갈등과 충돌을 빚어내

고 있는 남성 개개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그 수요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드러난 적이 없었던 남성들의 숨겨진 갈등 요인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남성 집단 속에 매몰되어 얼굴과 목소리를 숨기고 있는 구성원들이 아닌,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되고 풀리지 않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남성 ‘개인’ 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남성들의 성은 동성 집단 속에서 남성성 규범의 준거집단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포장되거나 숨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만났던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했었던 자신의 성매매 방지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의외로 그 교육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과 참여가 컸다고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예비군 훈련 중의 교육이라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훈련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따라서 남성들이 성매매 이슈에 대한 집단화된 반응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삶의 일부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개인’의 입장에서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권력관계가 오직 ‘개인 대 집단’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남성다움의 규범이 주로 동성 집단의 시선을 통해 유지되고 확산된다는 점, 그리고 남성 개개인의 성찰성이 집단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방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남성의 젠더’와 ‘개인/집단의 정치학’이 갖는 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맺음말

이 글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남성 성욕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성구매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나는 차별적으로 젠더화된 사회구조 및 그와 맞물려 있는 현대사회의 핵심적 남성성 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남성들의 성구매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려 했다.

구조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게 한편으로는 성적·경제적 능력에 기반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서적·관계적 한계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기대·요구하며 그들의 성을 사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면은 그러나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욕구’ 역시 경제적 능력을 매개로 하여 상대 여성을 동등하고 주체적인 교류의 파트너가 아닌 도구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2장의 내용이 남성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확인하고자 한 측면이라면, 3장은 경제적 권력을 통해 ‘소유한’ 여성으로부터 감정노동을 - 실제로는 조작



된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기를 거부하면서 - 요구하는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남성들은 ‘여성보다 우월한 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을 유지·강화하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경험을 공유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득권과 남성성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들의 권력 경험은 ‘모순적’이라, 그 반대급부로서 남성들은 소외감 등 개인적 차원에서 정서적·관계적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남성들의 ‘권력(power)’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통(pain)’으로 표현되곤 한다.<sup>20)</sup> 물론 이는 여성이 받는 체계적 억압과는 다른, 이른바 개인적 차원의 피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고통’은 남성에게 제물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의 전망을 제공해줄 수 있다. 남성 스스로도 기존 젠더 구조의 해체로부터 이로운, 즉 ‘고통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여성주의적 실천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섹슈얼리티’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한 ‘권력 실현’이나 ‘조작된 쾌감’이 아닌, 주체와 주체 간의 친밀감이나 소통 그리고 솔직함에 근거한 성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구매 경험 남성들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 남성들 사이에 변화를 위한 ‘씨앗’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작 성구매를 통해서도 성매매 업소를 찾는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조직 문화 속에서 성구매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남성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이른바 ‘권력’과 ‘고통’의 유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내야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남성이 겪는 개인적 차원의 억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오히려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글의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한계가 그 해법으로서 돈을 통해 ‘여성을 정서적으로 도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젠더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에 대한 기여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공·사 영역을 가로지르며 ‘구조적 지배’와 ‘개인적 고통’을 직조하는 젠더 시스템에 분열을 일으키는 작업은, 결국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젠더 질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제 막 작은 갈등을 빚어내기 시작하는 한 남성 개인의 성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는 개인이고 실천은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품어야 할 시각만큼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무정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자유 거래로 보지 않고, 사회적 기득권과 제도화된 특권을 보장 받는 남성지배 구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넓은 시각 말이다.

20) Kaufman, M. (1994), 'Men, Feminism and Men's Contradictory Experiences of Power', *Theorizing Masculinities*, Sage.

# 여기자의 시대는 왔는가?

-언론사 우먼파워의 실상과 허상-

심양 섭<sup>2)</sup>

국내 중요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는 2007년 수습기자 아홉 명을 뽑았다. 그 중 여섯 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중앙일보는 2000년 수습기자를 남녀동수로 뽑으면서 한국 언론 역사에 여기자시대의 서막을 열었지만, 수습기자의 3분의 2를 여성으로 뽑기는 2007년 이 처음이었다. 과거 언론사 수습기자 시험에서는 여성을 뽑지 않았거나 뽑더라도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중앙일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의 수습기자 중 대체로 3분의 1 이상은 여성이다.

이와 같은 한국 언론사의 여기자 채용 붐에 힘입어 언론계 전체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한국언론재단이 격년으로 발행하는 『한국신문방송연감』에 의하면 비기자 직군을 포함한 한국 언론사 전체의 여성종사자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 2005년부터는 20%를 넘어섰다. 1999년의 12.2%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여기자의 외형적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여기자의 간부직 진출도 눈에 띈다. 종전까지만 해도 여기자는 기껏 올라가봐야 문화부장, 논설위원, 편집국 부국장이 고작 이었고 그나마도 가뭄에 콩 나듯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2000년엔 한국 최초의 여성 언론사 사장이 탄생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각 언론사의 주필, 편집국장, 논설위원, 해외특파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금녀의 영역으로 불렸던 핵심보직에 여기자들이 다수 포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자 가운데 정치부장, 경제부장, 국제부장, 청와대 출입기자, 사회부 사건팀장, 노조 사무국장 같은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는 이도 늘어났다. 편집국이나 보도국 내 부서배치에 있어서도 종래 여기자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화부, 생활부 위주에서 벗어나 흔히 권력부서로 일컫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기자들이 활약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당 기자실이나 검찰청 기자실에서 많은 여기자들이 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여기자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 전

2) 『여자가 기자가 된다』(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저자, ysgoodfriend@naver.com/016-262-9308

체 언론사에서 여기자의 위상은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언론사 내 성차별은 사라진 것인가. 여기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신문과 방송의 기사도 여성 친화적으로 변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기자란 직업은 과연 여성이 꿈꾸어 볼만한 것인가.

언론계에서의 소위 우먼파워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아직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마치 속빈 강정과도 같다. 우선 한국 언론사의 여성 종사자 비율이 2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뿐 아니다. 여기자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간부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주요 신문방송사의 차장급 이상 간부 기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변함없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2000년 이후 수습 기자 시험에서 여기자를 종전보다 많이 뽑았기 때문에, 경력 10년 이하 기자 가운데에는 여기자 비율이 비교적 높아졌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남녀기자 간에 차별이 없어진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다. 예전에는 여기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야근이나 출장을 면제해 주었으나 지금은 남자 기자들과 똑같이 야근도 시키고 출장도 보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편집국이나 보도국 내에서 부서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이제 여기자가 없는 부서는 없다. 하지만 정치부나 경제부 같은 중요 부서의 경우 사실상의 여기자 정원(T/O)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나와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중앙 언론사 정치부와 경제부 기자 가운데 여기자 비율은 20%에도 못 미치고, 실력이나 전문성, 능력, 희망에 따라 부서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 목적으로 부서마다, 출입처마다 한두 명씩만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자가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를 보면 여성 친화적으로 바뀐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신문이나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여전히 검은 양복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대 국회부터 두 자리 수가 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중 여성은 41명으로 13.7%에 이르지만,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도의 초점은 정책이나 견해에 맞추어지지 않고 옷차림 같은 주변적인 정보에 맞추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사 중간에 등장하는 전문가 코멘트의 십중팔구는 남성이다. 뉴스 속의 여성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의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가치 있는 제품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만 묘사된다. 성추행이나 성매매에 관한 보도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이나 불법성, 해악을 드러내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로 흐르기 일쑤이다.

여기자가 많아져도 기사가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자의 비율이 아직 30%에 못 미치는 것에 기인하는 영향이 크고, 여기자의 수가 30%를 넘어서면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라는 시각들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뉴스의 가치와 언론사의 논조를 정하는, 즉 의사결정권을 지닌 간부급 기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언론사마다 편집국 혹은 보도국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여성은 고작 한두 명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뉴스가 남성적 관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여기자의 숫자가 늘어도 기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사 내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도 여전하다. 언론사 사주와 핵심 편집 혹은 보도 간부들은 술자리나 골프회동 같은 비공식 모임을 통해 지배 집단을 형성한다. 그곳에서 편집 혹은 보도 방향이나 중요한 인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자리에 여성은 없다. 출입처에서도 남성 취재원과 남성 기자들은 그들만의 술자리 문화와 여흥으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한다. 언론사들의 남성 간부들은 회사 이미지 개선 목적으로 여기자를 활용하고 있을 뿐, 여기자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다.

한국 언론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하다. 한국 언론재단의 200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 전반의 기사나 보도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32%에 그친다. 한국언론재단은 2년마다 같은 조사를 하는데 언론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2002년에는 25.3%였고, 2004년에는 19.5%까지 곤두박질쳤다가 2006년 들어 어느 정도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크게 못 미친다. 인터넷과 24시간 뉴스전문 케이블 같은 뉴미디어(new media)의 등장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신문방송, 즉 기존 미디어(old media)의 위상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신문 정기구독률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한국언론재단의 같은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신문 정기구독률은 40.0%로 나타나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다. 신문구독률은 1996년 69.3%, 1998년 64.5%, 2000년 59.8%, 2002년 52.9%로 2002년까지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신문을 정기 구독했으나 2004년 48.3%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2006년 들어서는 40.0%까지 떨어진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문방송 대신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서 신문방송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위력이 팔목상대할 만큼 커졌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왜 증가하고 있는가. 언론이 부패하고, 편향적이며, 부정확하고, 전문성을 결여하였으며, 변화에 둔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50편을 쏟아내는 물량주의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낀다. 300명 미만(뉴욕타임스는 1,200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그 많은 기사를 쓰려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겠는가. 언론의 지나친 독자 혹은 시청자 확보 경쟁은 그 부작용이 심대하다. 선정주의가 지나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언론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정파적이라는 비판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제기될 정도이다. 독자나 시청자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사끼리 이념대립을 넘어선 과도한 감정대립을 노정하기도 한다.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하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MBC ‘PD수첩’이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때 MBC와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방송사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비난하는 데 급급했다. 난자채취과정에서의 여성인권문제나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의 생명윤리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황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여론을 오도했던 언론사들 중에 사과한 곳은 없었다. 한국의 많은 기존 언론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에도 인색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언론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동안 ‘언론=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은연중에 지배해 왔다. 현재 언론의 위기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의 실패이자, 끊이지 않는 부조리로 점철되었던 언론의 남성 중심적인 관행의 실패이며, 남성 우월주의의 실패인 것이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 소위 권언유착은 다름 아닌 남성 중심적인 언론의 산물인 것이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나 역시 전직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실패에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언론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언론을 망친 남성 중심적인 시각과 리더십의 퇴장,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양성평등적인 시각과 리더십의 등장이 한국 언론 위상 회복의 첩경이다. 전근대적인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와 관행,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들의 아이디어와 마인드가 갖는 장점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자라는 직업은 종래 남성만의 직업으로 여겨졌다. 그만큼 거칠고 험한 것이 기자라는 직업이었다. 오죽하면 기자직을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다(Dangerous)는 의미에서 3D직종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을까.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자의 노동 강도가 센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최상위의 우수한 남성 인력들은 언론계 진출을 회피하는 경향마저 생겨났다. 이틈을 여성들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여성들에게는 언론사만큼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종도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여성은 과거와 달리 언론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정보획득 통로가 그만큼 다양해진 까닭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감성시

대에는 섬세하고 민감한 여기가 훨씬 더 독자나 시청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쓰고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아 기자는 여성이 꿈꾸어 볼 만한 직업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언론사 내에 오래도록 뿌리내리고 이어져 내려오는 성차별 관행이다.

언론계의 여전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양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별의 구조적 성격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언론재단이 2003년에 펴낸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에서 제시하는 ‘여성언론인의 지위향상과 주류화를 위한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하여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의 제시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다루었다.

여기자 차별 극복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기성 언론인들의 인식 전환, 둘째, 언론사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타파, 셋째, 자리와 기회의 균등이다.

첫째, 기성 언론인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성차별 체감도로 보면 여성은 성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데 비해 남성은 성차별이 크게 줄었거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이 언론사에서 중요한 부서, 그리고 영향력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급과 지위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남성 언론인들의 인식전환이 없이는 성차별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성차별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이나 제도 도입, 관행 개기에 기성 언론인들이 미온적이거나 이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성차별이 없다고 믿는 기성 언론인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과 계몽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 강연회나 좌담회를 개최하고, 여성기자모임을 활성화하며, 사내 노조에 여성임원을 배정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언론사 내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언론사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도, 해체할 수도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경영진, 사주, 임원들의 사고전환이 우선적이며 필수적이다. 언론사 경영진, 사주, 간부의 양성평등 가치관 수용과 이에 따른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외곽에서 여성단체, 여성정책기관,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고 항의해야 한다.

둘째, 언론사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남성들은 학연(고등학교와 대학교), 혈연,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이들은 골프, 사우나, 회식 같은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결속을 다진다. 남성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고급정보’를 주고받는다. 거기에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취재원들도 가세하게 된다. 여기자의 경우 이러한 서클에서 배제됨으로써 언론사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언론사내의 이러한 남성 중심적이고 비공식적인 결사체들을 해체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고, 이러한 서클들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사주와 경영진의 결단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많은 여성기자들이 경영진, 그리고 사주의 철학과 결단이 언론사내 성차별 철폐의 관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

셋째, 자리와 기회의 균등이다. 해외특파원, 해외출장, 국내외 연수, 세미나와 워크숍 참가, 국내외 언론관련 기관의 해외연수나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기자들에게는 다양한 자기발전의 기회가 있다. 이는 기자로서 경험을 넓힘과 동시에 전문성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와 특파원 파견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있어서 여성은 차별받는다.

이러한 차별은 곧 여성의 조기 퇴직이나 이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나마 최근에는 여기자들도 비교적 활발하게 해외특파원으로 진출하지만 아직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여기자를 해외특파원이나 종군기자로 파견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 지도자급 여성언론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 남녀를 막론하고 기자들에게 커리어플랜(career plan)을 내도록 하는데 이는 기자를 소모품이 아니라 자유 전문직으로 대우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간부직 여성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 여기자의 간부급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인도 일종의 전문직이다. 전문직에게 있어서 승진이 갖는 의미는 일반직종에서의 그것만큼 결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직무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발휘가 더 중요하다. 전문직은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만족도가 커진다. 그럼에도 여성언론인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승진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과 같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대개 지위와 자율성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내에서도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도의 의제나 논조를 결정하는 데 깊이 간여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게 된다.

언론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승진을 결정하지 않고 남성을 우선 승진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연숙 서울신문 기자(2008년 현재 한국여기자협회회장)는 여기자가 간부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둘째 가사와 육아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셋째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책임감

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녀 기자간 부서배치의 차별도 극복해야 한다. 여기자들은 부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 침묵하지 말고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동조합 같은 조직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선택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이후 여성기자들이 정치부보다 문화부를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기자들이 희망하는 부서는 문화, 경제, 사회, 정치부 순이다. 이는 한국 정치에 대한 전반적 혐오증과 함께 언론에서 정치기사, 정치부서의 매력과 영향력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남녀 공히 정치부를 싫어하는 것은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고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경제부는 정치부에 비해 정시 퇴근이 훨씬 용이하지만 딱딱한 뉴스를 다룬다는 점에서 부드러운 기사를 다루는 문화부만큼은 인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부나 경제부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부서들을 거치지 않으면 이후에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과 같은 중요 보직에 오르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된다. 아니, 여성을 국장자리에 앉히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핑계거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차별은 여기자가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사내 부서장벽은 '성별 균형(gender-balance)'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언론사의 성차별 문제는 언론사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정부는 영국처럼 방송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방송사에 특정 권리를 부여할 때 해당 방송사의 여성채용 현황, 고위 관리직 여성현황, 이사회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언론사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각 방송사는 사내 평등담당관을 채용하여 직원채용, 부서배치, 그리고 승진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여직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들의 승진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현황<sup>22)</sup>

주 재 선 본원 전문연구원

본 분석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범주를 기초로 조사된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근로형태별)를 재분석한 것으로, 한국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근로환경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규모

### 여성 임금근로자의 42.1%는 비정규직

2007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는 6,647천명으로 2002년 동월대비 875천명의 증가를 보였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동기간 정규직 여성은 272천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1,14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28.6%에서 2007년 42.1%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규모는 1,649천명에서 2,796천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남성의 경우 동기간동안 정규직은 66천명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04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2007년 현재 남성 임금근로자 중 31.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즉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비율의 증가를 보면 2007년 현재 5년 전과 비교하여 여성은 13.5%p, 남성은 8.9%p 증가하여, 비정규직의 남녀차이가 111천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비정규직 여성을 근로형태별로 보면,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가 1,625천 명로 가장 많고 시간제 근로자가 843천명, 특수고용 근로자가 421천명, 일일 근로자가 291천명, 용역근로자가 253천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한시적 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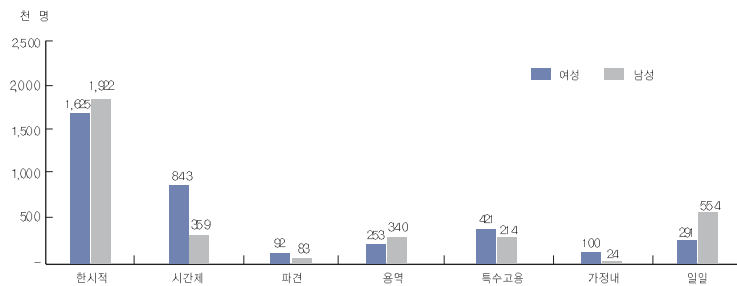
22)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근로형태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년 3월 혹은 8월에 실시되었으며, 본 분석은 각 년도 8월에 생산된 자료를 분석함.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성인저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re.kr>)을 참조하기 바람.

〈표 1〉 성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

(단위: 천명, %, %p)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2-'07	
								증감	증감률
임금근로자	계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852	13.2
	여성	5,772	5,866	6,096	6,286	6,442	6,647	875	15.2
	남성	8,258	8,283	8,489	8,682	8,909	9,235	977	11.8
정규직	계	10,517	9,542	9,190	9,486	9,894	10,180	-337	-3.2
	여성	4,123	3,546	3,434	3,539	3,690	3,851	-272	-6.6
	남성	6,394	5,996	5,756	5,947	6,204	6,328	-66	-1.0
비정규직	계	3,513	4,606	5,394	5,482	5,457	5,703	2,190	62.3
	여성	1,649	2,320	2,662	2,747	2,752	2,796	1,147	69.5
	남성	1,864	2,286	2,732	2,736	2,705	2,907	1,043	55.9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비율	계	25.0	32.6	37.0	36.6	35.5	35.9	10.9	-
	여성	28.6	39.5	43.7	43.7	42.7	42.1	13.5	-
	남성	22.6	27.6	32.2	31.5	30.4	31.5	8.9	-

〈그림 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분포



주: 비정규직 유형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어, 비정규직 유형의 합과 비정규직 계는 불일치함.

## 주요 변수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분포

### 20대 여성임금근로자 100명 중 31명은 비정규직

연령계층별로 비정규직 여성 분포를 보면 1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74.1%로 가장 높았고, 20대 부터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31.2%로 가장 낮았지만 지난 5년간 정규직이 322천명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210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여성은 비정규직이 73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5년간 비정규직 증가 또한 큰 연령으로 나타났다.

### 초졸여성 비정규직비율 61.6%, 대졸이상 비정규직 비율 30.6%

교육정도별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초졸이 61.6%로 가장 높고 중졸 49.5%, 고졸 44.9%, 전문대졸 30.8%, 대졸이상 30.6%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고졸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여 정규직이 244천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528천명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두에서 가장 큰 증감을 보였고, 대졸이상 여성은 정규직 증가가 246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정규직 증가 또한 256천명으로 매우 컸다.

〈표 2〉 연령별 여성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분포

(단위: 천명)

구분	2002			2007			'07-'02 증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5,772(100.0)	4,123(71.4)	1,649(28.6)	6,647(100.0)	3,851(57.9)	2,796(42.1)	875	-272	1,147
15~19	176(100.0)	113(64.2)	64(36.4)	116(100.0)	31(26.7)	86(74.1)	-60	-82	22
20~29	2,034(100.0)	1,644(80.8)	390(19.2)	1,922(100.0)	1,322(68.8)	600(31.2)	-112	-322	210
30~39	1,429(100.0)	1,029(72.0)	399(27.9)	1,667(100.0)	1,040(62.4)	627(37.6)	238	11	228
40~49	1,283(100.0)	876(68.3)	407(31.7)	1,673(100.0)	933(55.8)	739(44.2)	390	57	332
50~59	558(100.0)	335(60.0)	223(40.0)	857(100.0)	403(47.0)	454(53.0)	299	68	231
60+	292(100.0)	126(43.2)	166(56.8)	412(100.0)	122(29.6)	290(70.1)	120	-4	123

〈표 3〉 교육정도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분포

(단위: 천명)

구분	2002			2007			'07-'02 증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5,772(100.0)	4,123(71.4)	1,649(28.6)	6,647(100.0)	3,851(57.9)	2,796(42.1)	875	-272	1,147
초졸	829(100.0)	459(55.4)	370(44.6)	753(100.0)	289(38.4)	464(61.6)	-76	-170	94
중졸	771(100.0)	538(69.8)	233(30.2)	654(100.0)	330(50.5)	324(49.5)	-117	-208	91
고졸	2,528(100.0)	1,792(70.9)	736(29.1)	2,810(100.0)	1,548(55.1)	1,262(44.9)	284	-244	528
전문대졸	737(100.0)	600(81.4)	137(18.6)	1,019(100.0)	704(69.1)	314(30.9)	282	104	177
대졸이상	909(100.0)	734(80.7)	175(19.4)	1,412(100.0)	980(69.4)	432(30.6)	503	246	256

### 기혼 여성 임금 근로자 100명 중 46명은 비정규직 근로자

혼인상태별로 비정규직 여성비율을 보면 2007년 현재 기혼여성이 46.3%로 미혼여성(32.9%)보다 13.4%p 높았으며, 비정규직 증가 또한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2002년과 비교하여 기혼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52천명 감소하여 미혼여성보다 감소규모가 작았으나, 비정규직이 867천명 증가하여 미혼여성(279천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미혼여성의 비정규직 증가가 기혼여성에 비해 작다고 하여 고용형태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미혼여성의 경우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이 279천명 증가했음에도 임금근로자의 증가가 61천명에 그쳤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219천명 감소했기 때문으로, 미혼여성은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가 비슷한 규모로 증감하고 있었다. 한편 기혼여성은 지난 5년간 815천명의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혼인상태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분포

(단위: 천명)

구분	2002			2007			'07-'02 증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5,772 (100.0)	4,123 (71.4)	1,649 (28.6)	6,647 (100.0)	3,851 (57.9)	2,796 (42.1)	875	-272	1,147
미혼	2,057 (100.0)	1,640 (79.7)	418 (20.3)	2,118 (100.0)	1,421 (67.1)	697 (32.9)	61	-219	279
기혼	3,715 (100.0)	2,483 (66.8)	1,232 (33.2)	4,530 (100.0)	2,431 (53.7)	2,099 (46.3)	815	-52	867

## 농림어업 여성 임금 근로자 중 100명 중 84명은 비정규직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작지만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 농림어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84.0%로 나타났고 금융·보험업(66.1%),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59.4%) 등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임금근로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광업을 제외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이 2007년 현재 13.6%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고, 운수통신업(22.3%), 제조업(28.1%) 등의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임금근로자가 129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된 대부분의 여성은 정규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변화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정규직은 215천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86천명 증가하였다.

〈표 5〉 산업별 비정규직 여성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 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 대사업 서비스	공공 개인사업 서비스
2002	임금 근로자	5,772	80	1	1,256	10	109	924	789	127	372	433	1,672
	정규직	4,123	22	1	1,025	6	69	635	604	94	177	249	1,242
	비정규직	1,649	58	0	231	4	40	288	185	33	196	184	430
2007	임금 근로자	6,647	87	1	1,127	15	146	940	875	150	390	737	2,179
	정규직	3,851	14	1	810	13	85	531	508	117	132	299	1,342
	비정규직	2,796	73	0	317	2	60	409	367	34	258	438	837
비정규직 비율	2002	28.6	72.5	0.0	18.4	40.0	36.7	31.2	23.4	26.0	52.7	42.5	25.7
	2007	42.1	84.0	0.0	28.1	13.6	41.4	43.5	42.0	22.3	66.1	59.4	38.4
'07-'02 증감	임금 근로자	875	7	0	-129	5	37	16	86	23	18	304	507
	정규직	-272	-8	0	-215	7	16	-104	-96	23	-45	50	100
	비정규직	1,147	15	0	86	-2	20	121	182	1	62	254	407

### 사무직 여성의 29.5%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별로 보면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농어업숙련 근로자(81.7%), 단순노무직 근로자(64.7%), 서비스판매직 근로자(51.1%)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50%이상 비정규직이었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36.5%)와 기능관련근로자(32.4%)의 경우 30%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은 전문가, 사무직 근로자에서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전문가 100명중 24명과 사무직 100명중 30명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002년과 비교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직업은 기능관련 근로자였고, 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한 직업은 서비스판매 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 장치기계조립근로자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판매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규모 모두에서 가장 큰 직업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업별 비정규직 여성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어업 숙련	기능관련	장치기계 조립	단순 노무직
2002	임금 근로자	5,772	8	588	492	1,300	1,839	18	365	253	909
	정규직	4,123	7	512	374	1,070	1,198	6	277	225	453
	비정규직	1,649	1	76	119	230	641	12	88	27	455
2007	임금 근로자	6,647	19	814	641	1,572	1,882	30	235	261	1,192
	정규직	3,851	14	622	407	1,108	921	6	159	194	421
	비정규직	2,796	6	192	234	464	961	25	76	67	771
비정규직 비율	2002	28.6	12.5	12.9	24.2	17.7	34.9	66.7	24.1	10.7	50.1
	2007	42.1	29.9	23.6	36.5	29.5	51.1	81.7	32.4	25.7	64.7
'07-'02 증감	임금 근로자	875	11	226	149	272	43	12	-130	8	283
	정규직	-272	7	110	33	38	-277	0	-118	-31	-32
	비정규직	1,147	5	116	115	234	320	13	-12	40	316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96.7만원으로 비정규직 남성 임금대비 61.5%

200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남성 임금대비 61.5%이었고 정규직 여성임금 대비해서는 67.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보면 여성은 정규직 142.6만원, 비정규직 96.7만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45.9만원 작았고, 남성은 정규직 236.3만원, 비정규직 157.3만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79만원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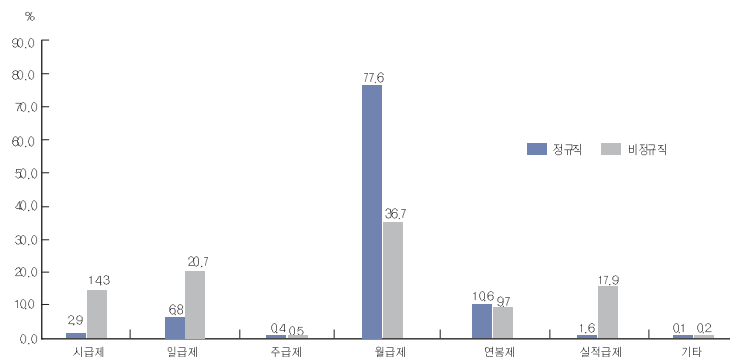
〈표 7〉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단위: 천원%, %p)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7-'02 증감
전체 평균임금 (천원)	임금근로자	132.5	146.6	154.2	159.3	165.6	174.5	42.1
	정규직	142.7	167.8	177.1	184.6	190.8	200.8	58.2
	비정규직	101.9	102.8	115.2	115.6	119.8	127.6	25.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71.4	61.3	65.0	62.7	62.8	63.5	-7.9
여성 평균임금 (천원)	임금근로자	93.6	102.2	108.9	112.6	118.5	123.3	29.8
	정규직	99.8	117.7	126.8	131.2	137.5	142.6	42.8
	비정규직	77.9	78.5	85.8	88.7	93.1	96.7	18.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78.1	66.7	67.7	67.7	67.7	67.8	-10.3
남자 평균임금 (천원)	임금근로자	159.7	178.1	186.8	193.1	199.6	211.4	51.8
	정규직	170.3	197.4	207.2	216.4	222.6	236.3	65.9
	비정규직	123.1	127.5	143.8	142.6	147.0	157.3	34.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72.3	64.6	69.4	65.9	66.0	66.6	-5.7
성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	58.6	57.4	58.3	58.3	59.4	58.3	-0.3
	정규직	58.6	59.6	61.2	60.6	61.8	60.4	1.8
	비정규직	63.3	61.6	59.7	62.2	63.3	61.5	-1.8

한편 노동시장에서 여성임금근로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비정규직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경우 남성은 2002년과 비교하여 5.7%p 증가한 반면, 여성은 이보다 큰 10.3%p로 나타났다. 임금형태별 분포를 보면, 2007년 8월 정규직 여성의 77.6%가 월급제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의 월급제가 36.7%를 차지했고 일급제와 실적급제가 각각 20.7%와 17.9%로 나타났다.

[그림 2] 임금형태별 여성임금근로자 분포



한편 임금형태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월급제와 연봉제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25.5%와 39.9%로 40%미만으로 나타났고, 이외 임금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이 모두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근로형태별 여성임금근로자의 임금형태 분포

(단위: 천원%)

구 분		전체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2004	임금근로자	6,096 (100.0)	451 (7.4)	894 (14.7)	35 (0.6)	3,740 (61.4)	456 (7.5)	503 (8.3)	17 (0.3)
	정규직	3,434 (100.0)	99 (2.9)	247 (7.2)	11 (0.3)	2,754 (80.2)	242 (7.0)	74 (2.2)	7 (0.2)
	비정규직	2,662 (100.0)	351 (13.2)	647 (24.3)	24 (0.9)	986 (37.0)	214 (8.0)	430 (16.2)	10 (0.4)
2007	임금근로자	6,647 (100.0)	513 (7.7)	840 (12.6)	28 (0.4)	4,014 (60.4)	680 (10.2)	564 (8.5)	8 (0.1)
	정규직	3,851 (100.0)	112 (2.9)	261 (6.8)	14 (0.4)	2,990 (77.6)	409 (10.6)	63 (1.6)	2 (0.1)
	비정규직	2,796 (100.0)	400 (14.3)	579 (20.7)	14 (0.5)	1,025 (36.7)	271 (9.7)	501 (17.9)	6 (0.2)
비정규직 비율	2004	43.7	77.8	72.4	68.6	26.4	46.9	85.5	58.8
	2007	42.1	78.0	68.9	50.0	25.5	39.9	88.8	75.0

## 여성임금근로자 중 시간외 수당 받는 비율, 정규직 43.4%, 비정규직 18.6%

비정규직 여성이 받고 있는 근로복지수혜 정도를 보면 5년 전과 비교하여 퇴직금이 12.2%p, 상여금이 10.6%p, 시간외 수당이 7.1%p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여성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은 퇴직금 28.4%, 상여금 24.4%, 시간외 수당 18.6%가 수혜를 받고 있는 반면,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58.4%, 상여금 57.9%, 시간외 수당 43.4%가 수혜를 받고 있었다.

〈표 9〉 근로형태별 여성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수혜

(단위: %, %p)

구 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2	임금 근로자	35.3	35.1	28.1	-
	정규직	43.0	43.6	34.7	-
	비정규직	16.2	13.8	11.5	-
2007	임금 근로자	45.8	43.8	33.0	39.5
	정규직	58.4	57.9	43.4	51.0
	비정규직	28.4	24.4	18.6	23.8
'07-'02 증감	임금 근로자	10.5	8.7	4.9	-
	정규직	15.4	14.3	8.7	-
	비정규직	12.2	10.6	7.1	-

###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33.9%

2002년 이후 비정규직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증가하여, 2007년 8월 현재 국민연금에 34.8%, 건강보험에 35.9%, 고용보험에 33.9%가 가입되어 있었다. 비정규직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2002년과 비교하면 각각 12.7%p, 11.6%p, 11.1%p로 상승했지만, 동기간 정규직이 더 높게 상승함에 따라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근로형태별 여성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정도

(단위: %, %p)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02	임금 근로자	40.1	42.5	37.5
	정규직	47.4	49.7	43.4
	비정규직	22.1	24.3	22.8
2007	임금 근로자	52.8	53.3	46.0
	정규직	65.9	66.0	54.7
	비정규직	34.8	35.9	33.9
'07-'02 증감	임금 근로자	12.7	10.8	8.5
	정규직	18.5	16.3	11.3
	비정규직	12.7	11.6	11.1

### 비정규직 여성, 주5일 근무비율 35.0%로 정규직과 비슷

비정규직 여성의 주5일(주40시간) 근무 비율은 35.0%로, 정규직(36.1%)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비정규직의 주5일 근무는 2005년과 비교하여 10.4%p 증가했고, 정규직의 경우 동기간 10.0%p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주 5일 근무비율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11〉 근로형태별 여성임금근로자의 주5일(주40시간) 실시여부

(단위: %, %p)

연 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5	25.4	26.1	24.6
2007	35.7	36.1	35.0
'07-'05 증감	12.1	10.0	10.4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여성임금근로자는 2007년 8월 현재 3.3%로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임금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비정규직 여성의 83.7%는 노동조합이 없어 가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10.4%,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본인의 의지에 의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표 12〉 근로형태별 여성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정도

(단위: 천명%)

구 분		전체	노동조합이 없음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자 안됨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자나 가입하지 않았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2003	임금 근로자	5,866(100.0)	4,935(84.1)	289(4.9)	265(4.5)	377(6.4)
	정규직	3,546(100.0)	2,868(80.9)	112(3.2)	225(6.3)	341(9.6)
	비정규직	2,320(100.0)	2,067(89.1)	177(7.6)	40(1.7)	36(1.6)
2007	임금 근로자	6,647(100.0)	5,351(80.5)	426(6.4)	363(5.5)	508(7.6)
	정규직	3,851(100.0)	3,010(78.2)	134(3.5)	291(7.6)	416(10.8)
	비정규직	2,796(100.0)	2,341(83.7)	292(10.4)	72(2.6)	91(3.3)
'07-'03 증감	임금 근로자	781	416	137	98	131
	정규직	305	142	22	66	75
	비정규직	476	274	115	32	55

부록 : 용어해설

비정규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해당됨
전일제근로자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 용역근로자 · 특수고용근로자 ·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 일일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고용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 판매 · 배달 ·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